

언론 사람

인터뷰

이상훈 대법관

심리학브런치

분노표현

언론중재위원회 NOW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입법 필요성 공방

2017
Vol.199

1





希望찬 새아침에
健康과 幸運을 祈願하오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백동성

CONTENTS

2017 January Vol.199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

 pacblog.kr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7년 1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계문사 T 02-725-5216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 02 **새해 인사**
 - 04 **인터뷰**
이상훈 대법관
 - 06 **미디어트렌드**
“시민이 기자다” 다시 떠오르는 참여저널리즘
 - 07 **언론중재위원회 NOW**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입법 필요성 공방
 - 08 **심리학브런치**
분노표현
 - 09 **언론법 이모저모**
대통령의 사생활
 - 10 **세상읽기**
돈과 권력의 함수
 - 11 **영화 속 설득이야기**
당신은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 12 **언중노트**
극혐의 자유
 - 13 **클로즈업**
 - 14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 15 **웹툰**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실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길에서 삶의 길을 찾다

이상훈 대법관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2000.3~2001.2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2008.2~2009.2 제주지법 법원장
2009.2~2010.2 인천지법 법원장
2010.2~2011.2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2011.2~ 현 대법원 대법관



66

법관은 오직 판결로 말한다고들 한다.
'단절' 혹은 '고립'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과 사회를 이해해야
'괜찮은 법관'이라 한다.
얼핏 모순처럼 느껴지는 말들 속에서
좁지만 가야할 길을 본다.
현직 대법관이 말하는
'괜찮은 법관'의 길 위에서
우리 또한 '괜찮은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99

Q | 2011년 2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법관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임명된 날 하루만 즐겁고 남은 임기는 내 내 더없이 괴롭다'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A | 해결할 사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 쉬운 사건이 있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단한 측면도 있었지만 대법관이라는 직에 따르는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임명된 날 하루 빼고 임기 내내 괴로웠다면 6년을 건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법관 직무의 엄중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저는 대법관이라는 대임을 맡게 된 만큼 바른 판결을 내리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대법관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Q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대법관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 등장하더라도 사람

이 아닌 판결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판결하는지 잘 모릅니다.

A | 정치에 있어서의 소통의 방법과 재판에 있어서의 소통의 방법이 같을 수 없겠지요. 법관은 판결로 말하고, 재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법관으로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저 역시 그렇게 하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토대로 사건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당사자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Q | 대법관 취임사에서 "임기를 마쳤을 때 그런대로 괜찮은 대법관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라고 하셨

습니다. ‘괜찮은 대법관’은 어떤 법관입니까?

A |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고, 예단 없이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는 자세가 법관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법관이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법관입니다. 법관은 때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며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법관이 사회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자세가 없다면 결코 괜찮은 법관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사실심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나 법률심 재판을 맡은 대법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Q | 이상훈 대법관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탈한 성품’이고 또 ‘원칙주의자’입니다.

A | ‘원칙주의자’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탈한 성품’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원칙주의자’라고 하면 앞뒤가 꼭 막힌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Q | 재판은 물론이고 조정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과 비교되는 조정의 장단점이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 승패를 가차 없이 가려주는 판결이 당사자에게 남기는 후유증을 고려하면 화해와 양보로 분쟁을 종결짓는 조정이 감정적인 앙금을 남기지 않아 매우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비율도 높아서 당사자에게 좋습니다. 당사자에게 좋으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또 조정제도에는 법관 외

에도 학식과 덕망, 전문성을 갖춘 사회 여러 분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별분쟁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사법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에는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법적 분쟁 중에는 ‘조정에 친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마저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차라리 법리로 재판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Q |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재판전담부를 맡으신 바도 있고, 대법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언론 관련 사건에서 주심을 맡으셨습니다. 언론 관련 재판에 임하실 때 고려하시는 원칙 같은 것이 있을까요?

A | 죄인이라도 말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등과 더불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상당수의 언론 관련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 모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자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나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의사소통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그 보장에 좀 더 무게를 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건 중에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은 그 직위의 특성상 비판을 감수해야 할 수인한도가 일반인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직에 있는 공인이 일반인과 똑같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Q | 몇몇 언론에서 대법관님을 ‘진보성향’으로 평했습니다. 아마도 대법관님이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건에서 다수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대법관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진보’ 혹은 ‘보수’라는 평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대법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소수의견을 종종 낸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틀릴 수도 있기에 제 의견 역시 오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론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대법관으로서의 제 직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신합니다.

Q | 이제 대법관 퇴임을 2개월 남짓 앞두고 계십니다. 33년간이나 일한 법원을 떠나는 심정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A | ‘심정이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임기 마쳤으니 물러나는 것이지요. 저의 관심은 마지막까지 제가 맡은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재판하는 것뿐입니다.



“ 시민이 기자다 ”

다시 떠오르는 참여저널리즘



ID 세상살이

어느덧 정치에 관심을 갖기는 사치가 돼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주권 행사를 하고픈 강한 떨림을 느낍니다. 광화문 광장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죄스런 마음에 이렇게라도 동참합니다.



ID 일지매

언론이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협박으로부터, 인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미래만은 지켜야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지켜주십시오.

오마이TV를 통해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을 시청한 시민들이 10만인 클럽에 회원가입하면서 남긴 글이다. 오마이TV는 지난달 100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촛불시위를 16시간동안 생중계했다. 전세계 212개국에서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시청한 시민들은 후원의 뜻을 밝혔다. 현재 오마이뉴스에 매월 만 원 이상 정기구독료를 내는 10만인클럽 회원은 1,500여명. 집회 기간에만 640명이 늘어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뉴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미디어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전국단위 시청률 3.39%에서 12월 1일 9.42%로 경추 뛰어올랐다. 같은 날 MBC뉴스데스크(4.2%)와 SBS8뉴스(5.3%)는 JTBC 뉴스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대통령 5초간 살인사건 미스터리' 편은 전국 평균 시청률 14.9%를 기록하며 평소 시청률(6~8%대)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언론에 대한 관심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과 언론 제보 등 참여저널리즘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중반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프레임을 내걸고 성장한 참여저널리즘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번 탄핵 국면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시민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는가 하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전하기도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청문회를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자신의 생각을 올린 글이 쏟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한 댓글도 눈에 띈다.

그간 정부 비판 보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진 이후, 시민들이 보도 공백을 스스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1,000여명 이상의 페이스북 '좋아요'를 모은 '박근혜닷컴'은 서명 청원운동을 통해 탄핵 가결을 촉구했고, 15,500여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최순실뉴스봇'은 언론사들의 단독 보도를 큐레이팅해서 사람들이 손쉽게 기사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모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페이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언론사들의 단독보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사라디오프로그램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현정 PD는 "제보 문자가 평소에 500~800개 정도 왔었는데 최근에는 2,000개 가까이 온다"고 말했다. 김민아 경향신문 편집국장도 "홈페이지 페이지뷰(PV)가 9월에 비해 30~40% 뛰었다. 제보도 많이 들어와 종종 특종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시민들의 활발한 뉴스 참여가 저널리즘을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내·외부 압력뿐만 아니라 자기 검열 등으로 자괴감을 느껴온 기자들이 한 목소리로 반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박진수 YTN 노조위원장은 "지난 8년간 파업 이후 해직 사태를 맞이하고 침체돼 있던 분위기가 상당히 진일보된 모습으로 바뀌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요한 것은 저널리즘 본연에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이윤석 JTBC 기자는 "시민들이 만든 콘텐츠를 보면 예전과 달리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며 "언론이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해소해주고 있는 것 같아 기자로서 자극도 되고 반성을 하게 된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입법 필요성 공방



지난해 10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인터넷상 위법·침해적 기사 수정·보완·삭제를 요청하는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잘못된 기사의 복제 및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구제책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을 두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구제방안이라는 평가가 존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상도 의원(새누리당)**과 언론중재위원회는 개정안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지난 12월 6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언론중재법 개정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잘못된 언론보도의 전파와 검색으로 인한 피해와 위법한 댓글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침해배제청구권은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안적,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이다.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SNS 게시물 등의 삭제를 명령하는 심의·검열기구라 할 수 없다.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침해배제청구권이 자칫 정부 등 권력자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언론보도는 역사적 기록물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신문사 등에서는 오보에 대해 뉴스소비가 피해구제요청을 해 올 경우 자발적으로 또 수시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포털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구제책을 실행하고 있다. 피해구제 문제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인터넷기사에 대한 기존의 피해구제 방법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 판결, 즉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잘못된 보도를 검색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나 알권리 침해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해자가 온라인 곳곳에 퍼진 기사와 여기에 달린 댓글을 수집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해외사업자를 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 등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원본기사의 데이터베이스 삭제, 논평이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언론사 서버의 기사까지 되는 것인지 법조문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현재 기사댓글에 대한 피해구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시조치의 남발 등의 문제가 있다. 명백한 허위 기사에 한해 기사댓글을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분노표현



화를 참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묵혀두면 병이 됩니다. 화병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편람(DSM-5)에도 “Hwa-byung”이라고 우리말 그대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 병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지 않고 화를 낸다고 좋은 것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화를 잘 낼 수 있을까요?

감정 표현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에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런 문화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막상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마트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 달라고 때를 쓰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다음에 사 준다면 집에 있는 장난감과 비슷하다고 설득해도 통하지 않자 엄마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서양 엄마들은 그냥 단순히 “I’m angry”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엄마들은 그 상황에서 화나거나 실망했다고 말하기 보다는 애꿎은 점원을 가리키며 “저 아저씨가 이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너 도대체 왜 이래?”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너’ 또는 ‘제3자’를 주어로 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상황과 무관한 사람의 입장을 빌려 와 분노를 표현하면, 말을 한들 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앞서 나온 ‘아저씨가 이놈 한다’ 정도는 약과입니다. “친구네 남편은 안 그러는데” 또는 “우리 엄마가 이걸 알면 뭐라고 하겠어?”와 같이 그 자리에 없는 남을 끌고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겠지만, 말을 뱉은 사람은 전혀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 남의 기분만 상하게 하고 내 기

분은 풀리지도 않고, 뒤에 이어지는 내 말의 강도가 낮아지지 않으니 이득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렸으므로 양가 부모님, 친구, 직장 등이 연루된 문제까지 튀어나올 확률이 높겠지요.

상대방을 주어로 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자식들도 저 모양이지” 또는 “너 언제까지 술 마시고 들어 올 거야?”와 같은 말은 사실상 질문이 아닙니다. 이를 들은 상대방이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헤아리거나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난으로 들리기 때문에 화를 돋우고 감정이 격해지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남을 빌려서 말하기,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 모두 돌려 말하는 것이 익숙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화난다, 열받았다, 성질 난다 이렇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마치 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서 억울하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내 자신입니다. 돌려 말하는 습관은 남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지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대체로 역효과가 납니다. “자주 술 마시고 들어오니 (나는) 너무 화가 난다”라고 내 중심의 표현(I message)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나는’

또는 ‘내가’를 문장에 넣을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 그 따위로 할거야?”라는 말에는 ‘나’라는 주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계속 게임만 하니까 성질난다”에는 분명히 ‘내가’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갈등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가는 표현이 부드러워 집니다.

남을 배려해서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실제 감정과 가장 가까운 단어로 제대로 표현해야 신체적 긴장이 줄어듭니다. 화로 인해 가슴에 돌덩이가 있거나 꽉 막히고 열이 올라오는 느낌을 갖는 것도 화를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은 탓입니다. 또 내가 화가 난다는데, 사람 사이의 감정이 더 날카로워지거나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비난 받는 것보다는 감정에 대해 듣는 것이 차라리 낫겠지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가족 간에 말다툼이나 직장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사이에 오갔던 중요한 말을 되짚어 보고 대안적 메시지로 바꿔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나’를 주어로 말하다 보면 많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그동안 당연하고 쉬운 길을 멀리 돌아 갔을 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사생활

PRIVACY

‘사생활’이라는 말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 기자들만 탓할 일은 아니다. 사생활을 명분 삼아 정당한 언론보도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2002년 3월 6일 모 중앙일간지 1면 톱으로 정치인 A 씨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관련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당시 A는 당 최고위원에 상임고문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서 동료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상태였다.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검은 돈인지 아닌지 자금의 출처로 쏠렸다. 이런 상황에서 A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근들이 함께 모여 회의하는 장면이 찍힌 것이다. A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며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2006년 한 방송사 카메라에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당 대표를 향한 불만을 쏟아놓는 국회의원 B의 모습이 잡혔다. 장소는 국회 본회의장이었고 대화 상대는 동료 의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동료 의원과의 사적인 대

화를 몰래 촬영하여 방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공적 영역이라 할 것이지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던가. 사생활을 빌미로 정당한 기사를 문제 삼는 공인들의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인정하는 한, 악용될 가능성 역시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생활 보호를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한 철학교수는 <프라이버시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공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사회적인 제도다. 개인의 권리와 사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사생활이 시시하거나 잡스러운 문제인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사생활 보호가 헌법 기본권 조항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양자 세계대전을 통해 경험한 전체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었다. 전체주의 하에서 개인의 존엄이나 권리는 설 자리가 없었고 오직 전체를 위한 희생과 봉사만이 미덕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다소 거칠지만 민주주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강변해도 여전히 사생활에는 미운털이 박혀 있다. 개인적으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생활을 전략적 방어수단으로 삼는 공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주요 증인들은 사생활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¹⁾ 또 국민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시간대에 단지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사로운 생활’로 간주하려는 공직자들의 모습도 합당하지 않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며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사생활이라도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것이면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위치일 뿐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는 위치는 아닐테니 말이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한계 중 하나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명시되어 있다.

돈과 권력의 함수

대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1,500달러 수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선 큰돈이지요. 돈에 무관심한 그는 현금으로 바꾸지도 않고 책갈피에 끼워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책과 함께 수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 왈 “돈이 좋은 좋은 모양이야. 책까지 돈을 따라가 버렸으니...”

새해 덕담으로 “부자 되세요”가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니 기분 나쁠 리 없는 신년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평생토록 이상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성경 잠언에 나오는 아굴입니다. 기도 중 ‘필요한 양식’이란 그날그날 먹을 것을 말합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 이니이다”하고 덧붙여 기도했기에 그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심입니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이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도 악행의 근원이 된다는 금언 또한 엄연히 존재합니다. 동양 고전에 나오는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지만(貧而無怨難),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富而無驕易)’는 말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의 경우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억제하면 그만이지만, 빈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무리 관대하러 해도 원망부터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는 노골적인 속담도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최근의 흡수저 타령이 그냥 타령에 그치고 만다면 다행이겠지요. 그러나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꼭 막혀 개천의 용은 아예 사라지고 계속 ‘왕대밭에 왕대’ 식으로 되어가면 가난한 자의 분노는 촛불에 너지가 되어 타오를 것입니다.

중국 요(堯)나라 노인처럼 땅에 누워 손으로 배 두드리며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 갈아먹으니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 있으랴”는 격양가라도 읊조릴 세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금의 덕’으로 상징되는 정치의 고마움 자체를 아예 느끼지 못할 정도의 다스림,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노래를 들으며 화내기는커녕 흡족한 웃음 짓는 어진 리더십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마음



에 깊은 상처를 안긴 혼란스런 정국 속에 새해를 맞으며 권력과 돈의 함수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자의 글에 나오는 ‘농단(壟斷)’이라는 말속에도 돈과 권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익을 독점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장을 살펴보고 자기 물건 팔기 좋은 곳을 골라 시리(市利)를 독점했다는 고사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높은 곳, 잘 보이는 곳은 권력의 정점이겠지요. 탄핵사건 변호인들에 따르면 ‘국정 농단’이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급기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라는 생소한 단어까지 등장했지요. 국가 원수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 격의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인들로서 사적 이해나 정치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 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들’에게서 돈 냄새마저 깨끗이 사라질지 자못 궁금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영화 <내부자들>로 보는 경청의 중요성

기자 “저기요 질문에 좀 집중하시고~ 정의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수?”

안상구 “고 얘기 난중에 허기로 하고, 잭 니콜슨이 나쁜 놈들한테 다구리틀...”

기자 “아니 영화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내가 지금 영화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안상구 “야야 사람 말하는 데 툭툭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 지금부터가 진짜께. 여튼 공께... 이런 썸. 그러니까... 아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영화 <내부자들> 감독관 첫 장면 대사입니다. 배우 이병헌의 사투리 연기가 음성지원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요(궁금한 분들은 한 번씩 보길 권장합니다). 바로 이 첫 장면부터 우리는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만납니다.

“경청(傾聽)”

몸을 낮게 기울여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설득에서 경청이 중요할까요? <내부자들>의 안상구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 도중에 흐름이 끊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말에 끼어든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이 급한 일이 있나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이런 “무시”를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 상대의 그런 행동이 자신을 “경멸”한다고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인, 즉 사회로부터 반복적인 “무시”를 경험한 분들이 단순한 ‘말 자르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론술>에서 “분노란, 정당한 취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노골적으로 경멸해서 여기에 노골적인 복수를 하려는, 고통을 수반하는 욕구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로 하여금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사람과는 대화가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지요.

한편 <내부자들>에서 우장훈(조승우 분)은 안상구로부터 중요한 과일을 받아내기 위해 그를 구속하겠다고 협박도 해보고 거친 욕도 해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안상구가 우장훈에게 마음을 열고 협조하겠다고 결심하는 계기는 우장훈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서 안상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이지요.

안상구 사람들이 날 어떻게 기억할런가?

우장훈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데?

안상구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 희생한 건달.

경청한다는 것은 결국 대화의 주인공을 상대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가 묻는 말에도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바로 주기보다는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계속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갈등 조정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

- ① 그렇게 하길 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 ② 당신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③ 상대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까?
- ④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오늘 우리가 합의한 사안은 무엇일까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대화의 주인공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만드는 것이죠. 영화 속 배우들 중에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의 역할은 주연의 연기가 빛이 나도록 그에 맞게 리액션 해주는 것이지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하는 나는 대화의 조연이므로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리액션해야 합니다. 리액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질문이지요. 오늘 나와 대화하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담긴 질문 한 번 던져주는 건 어떨까요?

극혐의 자유

지하철을 탄 한 남자의 사진이 담긴 뉴스가 포털사이트에 올라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를 'OO남'이라 부르며 비하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댓글란은 순식간에 기사와 무관한 사진 속 그를 향한 극혐(극도의 혐오감)으로 뒤덮였다.

출근길에 사진이 찍힌 것 같다는 그는 댓글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 심각성을 인지한 언론사는 해당 사진을 꽤 신속히 삭제했지만 악성 댓글이 여전히 남아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했다. 포털에서 주요 기사로 노출된 탓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회사에도 알려져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한나절도 안 되는 사이에 쏟아진 수백 개의 댓글들을 읽어보니 그의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기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는 댓글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신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얼마의 돈을 받는 것보다 댓글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기사의 댓글은 언론조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언론중재법은 후속기사 보도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을 언론보도로 한정하고 있다. 기사의 댓글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로 공유된 기사로 인한 피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니 다른 곳에 문의해 보시라'는 기계적인 답변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다양한 해결방안이 가능한 조정의 장점을 활용해보기로 했다. 우선 포털사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해당 사건 해결의 핵심이 기사의 '댓글'인 만큼 포털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무엇보다 신청인과 포털사 양 측이 같은 문제로 별개의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포털사로부터 댓글로 인한 피해에 깊이 공감한다며 구제를 돕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합의의 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희망과 함께 또 다른 고민이 다가왔다. 그가 원하는 것은 댓글이 사라지는 것인데, 댓글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산물이고, 그 자유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보호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어떤 표현도 함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까. 중재부는 궁리 끝에 그 답으로 '임시조치'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임시조치는 신청인이 포털사에 문제가 된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포털사는 삭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그 댓글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댓글



게시자에게 이를 알린다. 게시자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해 다룰 수 있고, 수용한다면 일정 기간 후 해당 댓글은 삭제됨으로써 절차는 종결된다. 댓글의 주인은 표현물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일방적인 삭제를 구하는 경우보다 완화된 판단 기준에 따르되, 보다 빠르게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청인과 포털사는 중재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별된 악성 댓글이 임시적으로 게시 중단되도록 했다.

약속한 중단 기간이 지나고 떨리는 마음으로 포털사에 임시조치의 결과를 문의했다. 댓글 게시자들로부터 한 건의 이의제기도 없이 신청인이 구제를 요청한 댓글이 모두 삭제되었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하게 찍힌 사진 한 장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신청인은 이제서야 마음이 놓인다며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전날 비가 내렸다. 회사 야외휴게실 나무테이블에 수막이 생겼다. 순간 눈 앞에서 마법이 펼쳐졌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깃털처럼 가볍게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며 자유낙하하더니 헬리콥터같이 회전하며 날개 달린 단풍나무 열매가 연착륙했다. 더 멀리 날아가서 어딘가에서 짝이 나고 자랐으면 좋겠지만 저리 내려앉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자연의 신비다. 생명을 다한 나무는 테이블로 태어났고 단풍나무 열매가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나무테이블은 순식간에 숲으로 변하여 황홀경을 보여준다. 이제 곧 해가 나고 빗물이 마르면 없어질 광경이었지만 사진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았다.

COMMISSIONERS >>> 위원동정



지성우 중재위원,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취임

지성우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2월 3일 제14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지 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아울러 이론을 정치과정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동국 중재부장, 시민사법참여단 간담회 발표

김동국 중재부장(강원중재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은 12월 6일 춘천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사법참여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춘천지법의 사법행정과 소통업무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김 부장은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민형사 재판의 충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했다.

김희정 중재위원, 지역언론연구 2016 학술세미나 사회

김희정 중재위원(제주중재부,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은 12월 6일 제주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로컬과 글로벌, 그리고 알고리즘 저널리즘’이란 주제로 개최된 지역언론연구 2016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김 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오고 갔다.

양승목 중재위원 <디지털시대 뉴스유통과 알고리즘> 세미나 사회

양승목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12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시대 뉴스유통과 알고리즘>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했다. 뉴스트러스트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 양 위원은 사회를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안정민 중재위원,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토론

안정민 중재위원(강원중재부,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이 12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 참석했다. <해외 지상파방송의 경영다각화 전략과 함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안 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해외 지상파방송의 수익 다각화 현황과 이를 위한 경영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상원 중재위원, <한국 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 발표

이상원 중재위원(서울제2중재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2월 16일 서울대 서암홀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 위원은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주제로 발표했다.



NEWS >>> 위원회 뉴스

사무처 인사

전보 (2017년 1월 1일자)

심리본부	조사팀	박은영
		권영민
	기사심의팀	팀장 임종우
		한혜연
	접수상담팀	팀장 김주용
		박경미
교육본부	교육운영팀	팀장 안백수
		홍지용
	교육콘텐츠팀	강향원
운영본부	연구팀	팀장 이수중
	기획팀	임미숙
	총무팀	팀장 여운규
		왕정민
감사실		박진규
광주사무소		소장 여종국

겨울방학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운영

교육운영팀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한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함께 견학, 모의조정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학생에게는 이수증이 수여된다. 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사무소에서 실시된다.

<언론중재> 겨울호 발간



연구팀은 12월 30일 언론중재 2016년 겨울호(통권 141호)를 발간했다. <Focus on Media> 코너는 ‘투명사회와 프라이버시권의 미래’를 주제로 ‘Zero 프라이버시 시대와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SNS 공간의 패러독스와 프라이버시’ 등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에서는 ‘동영상 뉴스 콘텐츠의 혁신과 OTT 서비스’에 대해 다루었다.

제1회 웹툰 공모전 수상작

금상

온달장군의 언론피해

글/그림 이현주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다리

언론중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